



-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 목 차

---

## ■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Executive Summary .....	i
1.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가 시급한 한국 .....	1
2.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둘러싼 문제점 .....	2
3. 시사점 .....	7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아연구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박 용 정 연 구 원 (2072-6204, yongjung@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 ■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가 시급한 한국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개선하여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투입 규모의 축소가 경제성장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개선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p로 마이너스 전환된 이후 2026~2030년에는 평균 -0.4%p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생산성(2010년 구매력 평가 실질 GDP/노동시간)은 2000년 18.4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13.4달러 상승했으나, OECD 평균 46.8달러에 비해 약 15달러 낮은 68% 수준에 불과하다.

#### ■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둘러싼 문제점

이하 노동투입, 노동생산성(산업별, 기업규모별), 규제 요인의 3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OECD 주요국들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노동투입 규모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하, 15~64세)은 2000년 64.4%에서 2015년에는 68.3%로 3.9%p 상승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OECD 평균 71.3%에 비해 3.0%p 낮고, 독일이나 일본 및 미국에 비해서도 4~9%p 정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2015년 한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8.6%로 OECD 평균 79.8%와는 1.2%p 정도 낮으나, 여성의 경우는 한국이 57.9%, OECD 평균이 63.0%로 5.1%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년 한국만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0.7%p로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연령대별로는 OECD 평균에 비해 청년층 고용률은 낮은데 고령층 고용률은 높다.** 한국은 2016년 15~24세 고용률이 27.2%로 OECD 평균 41.1%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65세 이상은 동 30.7%로 OECD 평균 14.1%를 크게 상회한다. **넷째,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오히려 점진적인 조정 필요성이 더 크다.**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399시간 축소되었지만, 2015년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서는 347시간이나 많다.

##### 2)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한국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세도 미약한 등 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2010년을 전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에서 2014년 -3.0%, 2015년 -1.7%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2012년에 약 0.8%까지 악화되었던 OECD 평균은 2015년 5.9%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0년 7.1%에서 2015년 1.5%로 크게 둔화되었다. OECD 평균은 2012년 이후 개선되면서 2년(2014~2015년) 연속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을 상회하였다. **둘째, 기업 규모별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29.7%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는 일본 56.5%, 독일 60.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3) 규제 요인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보면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와 노동생산성은 미약하나마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2013년 2.23으로 OECD 20개국 평균과 동일하고, 2000~2013년 평균도 한국은 2.23으로 OECD 평균 2.31과 큰 차이가 없다. 더 육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수준은 2013년 한국이 31.5달러, OECD 평균이 51.1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만, 2000~201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한국이 4.2%로 OECD 20개국 평균 1.3%를 상회함은 물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와 노동생산성과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실정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노동규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의 확대와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규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한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 촉진, 국방이나 안전 및 복지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분배는 물론 이와 관련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분배를 둘리싼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절대적 노동투입 규모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복지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부단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직업 교육·훈련 투자 확대를 통한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변화 대응 능력의 제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장 활력 활용도 개선,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노동생산성 개선 투자 지원 등의 정책 대안 추진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규제는 국가 간 경제·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가 시급한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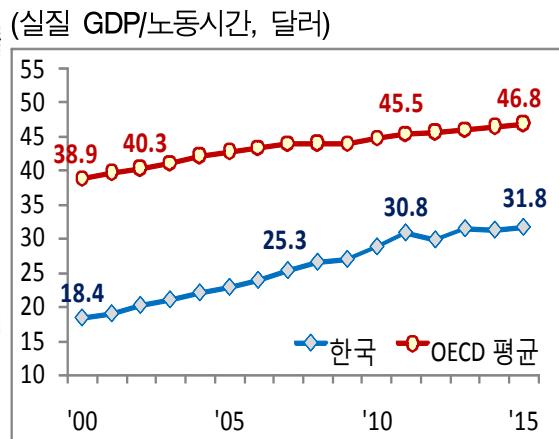
-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개선하여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
  - 향후 노동투입 규모 축소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칠 전망
    -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p로 마이너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후 2026~2030년에는 평균 -0.4%p로 악화될 우려
  - 노동투입 규모 축소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 개선도 정체
    - 한국의 노동생산성(2010년 기준 구매력평가 실질 GDP/노동시간, 이하 동일)은 2000년 18.4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13.4달러 상승
    - 단,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30.8달러로 3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5년 간 1달러 정도 상승한데 그침
    - 더욱이 2015년 OECD 평균 노동생산성 46.8달러에 비해서는 약 15달러 낮고, OECD 평균의 약 68% 수준에 불과
- 본고에서는 노동투입, 노동생산성(산업별, 기업규모별), 규제 요인 등의 3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OECD 주요국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노동투입 제고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lt; 한국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gt;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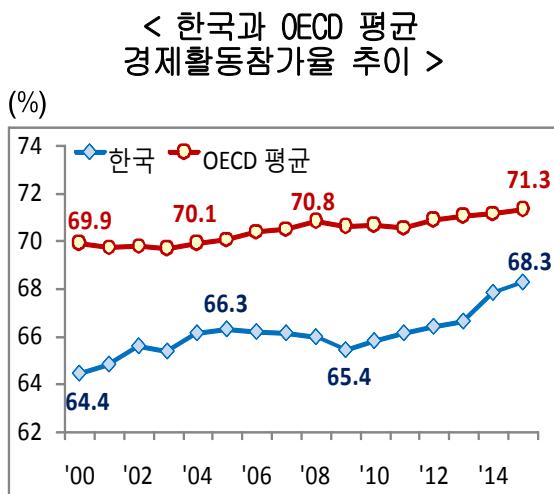
&lt; 한국과 OECD(평균)의 노동생산성 추이 &gt;

자료 : OECD.  
주 : 2010년 구매력평가(PPPs) 기준임.

## 2.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둘러싼 문제점

### 1) 노동투입 규모

-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나, 노동시간의 조정이나 성별 연령별 노동 인력 활용도 개선도 지연되고 있음
  - 노동투입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 투입 또는 노동시간 증가가 필요
    - 노동 투입 규모 = 노동자 수 × 노동시간
    - 위와 같이 정의할 경우, 노동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자 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노동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시간을 증가시켜야 전체 노동 투입 규모가 증가
  - 투입 노동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성별 연령대별 노동 인력 활용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으나, 개선 정도가 미미한 수준
    - 한국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4%에서 2015년 68.3%로 3.9%p 상승, 동기간 1.4%p 상승한 OECD 평균에 비해 상승세는 높았음
    -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동 경제활동참가율은 68.3%로 OECD 평균 71.3%에 비해 3.0%p 낮고, 독일, 일본, 미국에도 4~9%p 이상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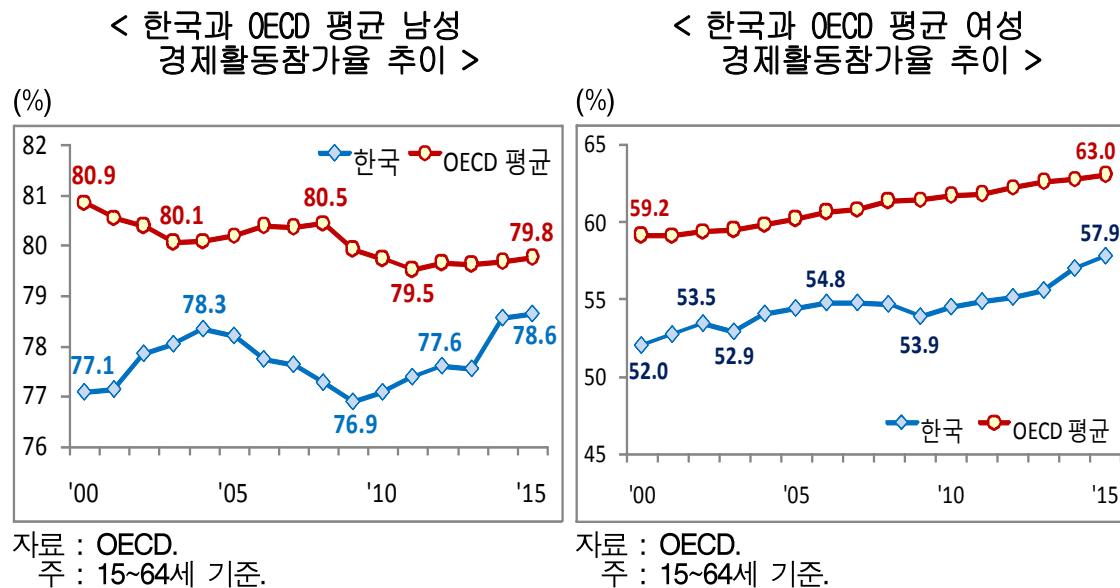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임.

< OECD 주요국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구분	2000년 (A)	2015년 (B)	B-A
미국	77.2	72.6	-4.6
일본	72.5	75.9	3.5
독일	71.1	77.6	6.5
한국	64.4	68.3	3.9
OECD 평균	69.9	71.3	1.4

자료 : OECD.  
주 : 15~64세 기준임.

- 2015년 한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8.6%, OECD 평균은 79.8%로 큰 격차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는 동 한국이 57.9%, OECD가 63.0%로 5.1%p의 격차가 있음
- 더욱이, 2015년 기준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7%p 인데 반해 동 OECD는 16.7%로 한국에 비해 4.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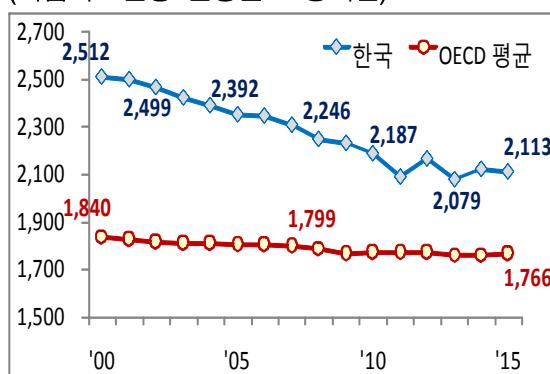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도 한국은 2016년 15~24세 고용률이 27.2%로 OECD 평균 41.1%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65세 이상은 동 30.7%로 OECD 평균 14.1%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오히려 점진적 조정의 필요성이 큼
  -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399시간 축소
  -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2015년 기준 347시간(월평균 약 29시간)이나 많은 수준
  - 더욱이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도 OECD 평균은 11.7%이나, 한국은 23.1%에 달함<sup>1)</sup>

#### < 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추이 >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자료 : OECD.

#### < OECD 주요국과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 추이 >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

구분	2000년 (A)	2015년 (B)	B-A
미국	1,836	1,790	-46
일본	1,821	1,719	-102
독일	1,452	1,371	-81
<b>한국</b>	<b>2,512</b>	<b>2,113</b>	<b>-399</b>
OECD 평균	1,840	1,766	-74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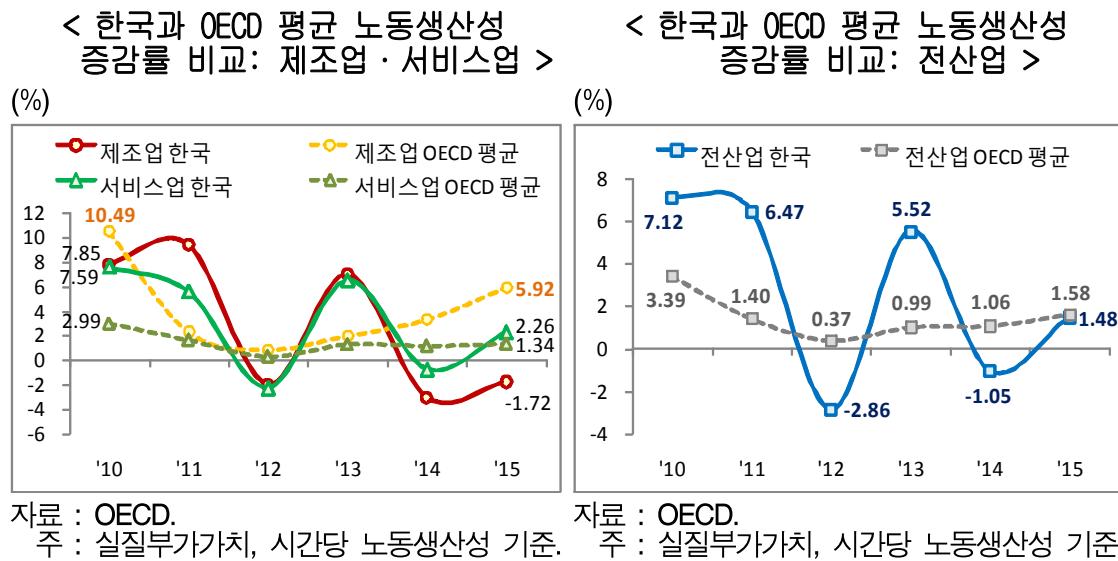
## 2) 노동생산성

- 한국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세도 미약한 등 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2010년 이후 크게 하락

-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악화로 전산업 노동생산성 개선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년 연속 전산업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을 하회
  -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85%에서 2014년 -3.00, 2015년 -1.72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대폭 하락한 반면 2012년 0.82%까지 악화되었던 OECD 평균은 2015년 5.92%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격차 확대
  - 이로 인해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12%에서 2015년 1.48%로 크게 둔화

1) OECD, 'Better Life Index 2016'.

- OECD 평균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또한 동기간 3.39%에서 1.58%로 하락했으나, 한국을 2년 연속 상회하는 수준



## ○ 대기업-중소기업 간 등 기업 규모별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수준

-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30% 미만 수준
  - 제조업 부문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1년 29.0%에서 2013년 29.7%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30%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음
-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일본과 독일의 50% 전후 수준
  -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부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한국 29.7%, 일본 56.5%, 독일 60.8%로 한국이 크게 낮은 수준

### < 제조업 부문 한국 · 일본 · 독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비중 > (대기업=100,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29.0	29.5	29.7
일본	39.0	37.8	56.5
독일	60.6	60.4	60.8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제조업 업종별·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주 : 일본은 1인당 제품출하액 기준, 한국과 독일은 1인당 부가가치 기준.

### 3) 규제 요인

-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보면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와 노동생산성은 미약하나마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 한국은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 수준이 OECD 20개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는 가장 빠름
    - 한국의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2013년 2.23으로 OECD 20개국 평균과 동일하고, 2000~2013년 평균도 한국과 OECD 20개국 평균이 유사한 수준
    - 노동생산성 상승세는 2000~2013년 한국이 4.23%로 OECD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단, 절대 수준은 2013년 한국이 31.5달러로 OECD 평균은 물론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OECD 20개국들을 대상으로 고용자보호지수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미미하나마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과 아일랜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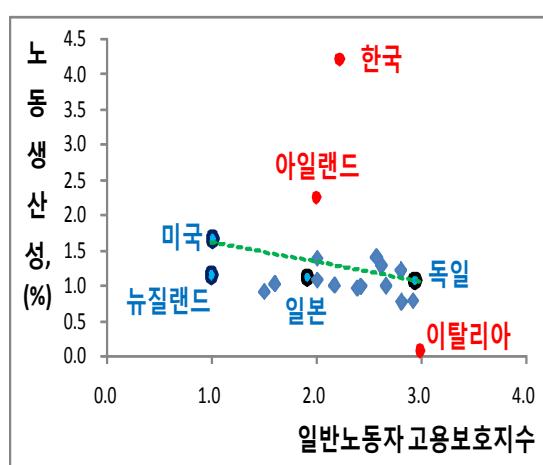
<OECD 주요국과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 비교>

구분	노동생산성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	
	'13 ('10년 평균 기준) ppp 달러 기준)	'00~'13 평균 증감률 (%)	'13	'00~'13 평균
미국	62.3	1.65	1.00	1.00
일본	40.8	1.14	1.91	2.03
독일	58.3	1.09	2.95	2.95
한국	31.5	4.23	2.23	2.23
OECD 20개국 평균	51.1	1.28	2.23	2.31

자료 : OECD.

주 :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높을수록 고용보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OECD 20개국) >



자료 : OECD.

주1) 노동생산성은 2000~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동기간 평균.

2)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높을수록 고용보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 3. 시사점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의 확대와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규제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건전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 의욕을 증진시키고 인재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야 함
    - 특히, 관련 부문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혁신과 시장화 촉진을 위해 우수 인재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정부공공부문에서도 국방, 안전, 복지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對 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일자리 분배는 물론 이와 관련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는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여성 활용도 제고,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균형 모색, 노동 시간과 임금의 조정 등을 통해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단, 이는 복지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함

- 직업 교육·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 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함
  - 이(異)분야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분야로의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노동생산성에 훨씬 못 미치는 생산성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 1~2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직업 교육·훈련 주체도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규제와는 상관없이 새롭게 나타난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정책의사결정부터 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큼
  - 따라서, 이미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문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단, 시장실패가 우려될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이 필요
-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설비나 기기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노동규제는 국가 간 경제·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노동생산성 수준 자체는 매우 낮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보여주는 현상과는 다르나 노동규제의 합리화는 필요
-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환경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라도 노동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부형 이사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박용정 연구원 (2072-6204, yongjung@hri.co.kr)